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5

May 2005

| 권두칼럼 |

인구고령화와 사회·경제공간
박삼욱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 경제동향 |

경기/고용/금융/부동산

| 경제포커스 |

서울시 산학연 협력의 실태와 시사점
신창호 (서울시장개발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장)

서울디지털 산업단지의 제도악 및 향후 발전방안
윤형호 (서울시장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지선 (서울시장개발연구원 연구원)

| 부록 |

통계표

인구고령화와 사회·경제공간



박삼욱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parkso@snu.ac.kr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세대간 소통이 원활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한 지역사회문화의 발전, 지식 정보사회에 적합한 고령사회의 실현 등은 모두 사회경제 공간의 변화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세대간 소통이 원활하고 지식교류가 활발하며 혁신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고령사회를 만들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사회경제공간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 인구의 7%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들어섰으며, 2019년이면 노인인구가 전인구의 14%가 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0년대에는 전인구의 20%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최근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3년에 1.19명으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

준이고 2005년 현재 평균수명은 77.9세로 선진국 평균보다 높다.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는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한국사회에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인구학자 폴 엘리스는 앞으로 진행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를 “고령화지진”이라고 표현하여 고령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삶의 공간을 크게 변화시킬 지진과 같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인구고령화 현상이 전국토에서 동일한 형태와 속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

재 진행 방향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차별적 속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70년 대 급격한 이촌향도형 인구가동으로 도시와 농촌간 인구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로 인해 서울 및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간의 격차 또한 커졌다. 예를 들면, 농어촌지역에서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7.1%로 도시지역의 5.5%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농촌은 이미 UN의 고령사회 기준을 3%이상 초과한 것이다. 일부 농어촌 지역은 노인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은 초고령사회에 속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인구구조의 지역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은 앞으로 국토공간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보다 앞서서 인구고령화를 경험한 서구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사회경제적 제도의 개선과 공간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서구사회에서도 나름대로 장기적 시각으로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으나 그 대책이 장기적이라는 면에서 국가적 과제로서의 우선순위를 잡하지 못하였고 정치인들 역시 장기적 대책과 과제에 대해 매력을 느끼지 못하여 체계적인 인구고령화 대책은 수립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선진국의 고령화사회 대책은 실패 또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늦었지만 OECD에서 회원국가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인구고령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경제사회연구회에서 협동연구를 시행한 바 있다. 이 협동연구에 여러 국

책연구원이 참여하여 인구고령화와 관련한 인구대책, 노동시장, 보건복지대책, 노인 주거, 거시경제, 재정 등의 연구보고서를 출판하였다. 이러한 협동연구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고령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2005년 4. 26 국회통과, 9월 시행)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금년 중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고령화와 관련된 정책은 단순히 현재의 노인세대들의 문제나 의식에 기초하는 것을 넘어 향후 20년 동안 계속 노인세대로 편입될 현재 40대 이상의 중년층의 의식,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 및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UN에서는 인구고령화가 범세계적 현상이 될 향후의 사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사회(A Society for All Ages)”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노인은 복지 수요자로서는 물론 사회에 통합되고 사회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 경제 및 문화적 제도와 체계의 변화에 장래 노인이 될 사람들의 의식, 기대 및 욕구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고령화 대책이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공간은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또 어떻게 공간을 조직하도록 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10여년이 지나면 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령사회에 합당한 사회·경제공간을 조직하는 것은 지금부터 준비해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농촌은 이미 고령사회 또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제도 및 체계변화는 불가피하게 공간적 재편성을 수반한다. 이러한 공간적 재편성은 또한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 제도의 획기적 개혁과 개선을 동반하여야 할 것이다.

인구고령화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은 우리의 예상을 넘어설 정도로 지대하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노동생산성의 약화, 노인복지·노인주거·노인의료 등 복지수요의 증대, 재정부담의 가중 등 광범위하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 때문에 인구고령화 대책은 단순히 노인병원이나 요양시설을 확대하고 노인복지를 강화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노동시장, 노인복지, 거시경제, 재정 등의 문제는 사회경제공간의 재편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따라서 인구고령화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공간”의 문제를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인구고령화로 인해 고려해야 할 사회경제공간의 변화를 몇 가지만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르는 사회로 발전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촌의 생활공간을 재조직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장수지역은 제주도와 호남 중산간 지역에

주로 분포해 있지만 서울의 강남구와 서초구도 장수도(65세 이상 인구 중 85세 이상의 인구비율)가 높은 지역이다. 중산간지역의 장수지역은 젊은층의 비율이 매우 낮지만 도시지역의 장수지역은 인구구조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현재 도시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은 높지 않지만 앞으로 출산을 저하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지역에서도 고령사회에 적합한 지역사회 생활공간을 조직하는 문제가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노인들만 모여 있는 노인주거단지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고령사회 복지타운의 모형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복지타운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장수지역에만 적합한 것이 아니라 대도시 주변의 교외지역과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역에서도 수요가 높을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둘째, 농어촌의 장수지역에서는 장수와 관련이 있는 지역의 전통자원이나 식생활 및 문화 등을 활용한 사회경제공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의 전통자원을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는 보존함과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의 전통적인 자원을 신산업화하는 것은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잠재시장 규모가 크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는 지역의 자원과 제품생산, 관광 및 서비스와 연결하여 다차원의 산업발전을 꾀할 수 있고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인구가 집중된 지역에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됨으로 인해 젊은이와 노년층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순창의 장류산업, 담양의 죽제품을 이용한 대나무 신산업화 등은 장수와 관련한 신제품개발을 지역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는 좋은 예라고 본다. 이들 지역에는 고급과학 기술인력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인근 도시지역의 연구 인력을 네트워크화하여 활용하는 가상혁신클러스터(virtual innovation cluster)에서 출발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고령친화산업의 기반 확대에 따른 경제공간의 재편을 고려해야 한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용품과 서비스 등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 고령친화산업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고령친화산업은 고령화에 대비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 요양 및 여가 등의 서비스 산업뿐만 아니라 다기능 건강 정보시스템, 한방 의료기기, 정보통신보조기기 등 고령친화 기기산업, 정보산업 등을 포함한다. 앞으로 이들 서비스와 산업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이러한 산업이 클러스터를 이룰 경우 도시 경제공간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고령친화산업의 세계적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바, 이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투자의 강화와 혁신클러스터의 구축은 앞으로 도시지역 경제공간을 역동적으로 변

화시킬 것이다. 또한 고령친화 휴양단지과 고령자용 주택개조, 은퇴농장, 전원형 고령친화농업 테마타운 등은 농촌공간의 재편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사회경제공간을 어떻게 재편해야 할 것인가는 지금부터 깊이 있게 연구하고 대응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들이 생활하는 공간의 재편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번 조직된 생활공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세대간 소통이 원활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한 지역사회문화의 발전,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고령사회의 실현 등은 모두 사회경제공간의 변화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세대간 소통이 원활하고 지식교류가 활발하며 혁신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고령사회를 만들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사회경제공간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SDI**